

# 7대 범죄 원천 배제... 음주운전 페널티·부동산 검증 강화

## 민주 비대위 지방선거 공천 기준 의결

### 여성·청년 가점 방안 오늘 결정 비리 단체장 제재는 논의 빠져 기초단체장 여성 의무공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두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 페널티도 강화하고 후보자들에게 대한 '부동산 투기 검증'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비리로 기소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현역 단체장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등은 논의하지 않아 혁신 공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전날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윤창호법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지방선거 기획단은 ▲업무상 위력 및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이용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신설됐다.

지방선거 기획단의 신현영 의원은 "우선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있다. 재심 과정이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외를 봐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성·청년 공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비례대표인 경우) 가능하면 당선 가능성, 즉 기호 '가, 나, 다' 중에서 여성과 청년은 가 순위로 주는 방식의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기획단은 31일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적인 가점 부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검증'을 강화한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자극할 만한 사례는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철저히 거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이날 박지현 공동비대위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 기획단이나 비대위 회의에서 추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호남 등에서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향후 강화된 기준으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 기획단은 다음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 여성·청년을 10%정도 의무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경우,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에서도 2~3명의 여성·청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치 교체, 혁신 공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심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호남에서부터 정치적 기득권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혁신 공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미래는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당선인 배식 봉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 국힘 광주시당 지방선거 체제... "청년층 기초의회 진출에 혼신"

### 공관위 구성 내달 2일 공천설명회

지난 20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의미있는 두 자릿 수 득표율을 올린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의 20·30대 청년 후보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시장 운영위원회와 열어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광주시당 공관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2명, 위원 4명 등 총 7명이며, 여성 30%, 청년 20%로 구성했다.

광주시당은 공관위가 구성됨에 따라 공천설명회, 후보자 모집,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PPAT) 평가 등 공천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4월 2일에는 이준석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공천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해 광역의회, 기초의회 예비출마자를 대상으로 공

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범을 치를 예정이다.

평가 날짜는 4월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며, 4월 5일부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접수 시 평가응시자를 동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현정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역·기초의원 접수자는 공직 후보자 역량 시험에 응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시민 눈높이 맞춰 깨끗한 후보자를 공천할 예정이며 20, 30대 청년층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음주운전 기준 강화, 광주·전남 선거구도 변수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 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장은 애초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거나 6·1 지방선거 기준으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15년 이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준만 피한다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광주에선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더라도 면허 정지자는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중앙당이 이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기준

을 강화하면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일부 예비후보들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예비후보가 당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2000년 초반에 여러 건이 적발돼 검증위가 공관위로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이관'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당은 3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중앙당에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광주시당의 '3진 아웃제'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더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임미란 시의원 50억원 광주 최고...전남은 131억원 이동현 도의원

### 공직자 재산 공개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을 보면 광주에서는 임미란 시의원이 50억4900만원을 신고해 광주 공개 대상자 33명 중 최고 자산가였다.

또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330명 중 최고재력은 전남도의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보성2) 의원으로 모두 13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2억9800만원 증가했다. 이 시장은 고향인 함평의 단독주택 증여,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태봉 위원장, 오윤수 사무국장은 각각 30000만원, 20000만원이 늘어나 22억3100만원, 6억2300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21명 중 15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8900만원이 늘어난 5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김광란(신고액 2억700만원)·김점기(3억2300만원)·김광실(15억9800만원)·반재신(1억3300만원)·신수정(3억6700만원)·이정환(11억9200만원)·이홍일(3억7300만원) 의원의 재산이 늘었다. 장연주(1억6300만원)·장재성(7억800만원)·정무창(2억3800만원)·정순애(14억3800만원)·조석호(3억200만원)·최영환(2800만원)·황현택(13억2900만원) 의원도 증가했다.

최고 재력가인 임미란 의원의 재산은 보유주식 단가 하락 등으로 32억3200만원이 줄어든 50억4900만원이다.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평균액보다 1억1300만원 증가했다. 20억원 이상 신고자는 41명(12%), 10억·20억

원 53명(16%), 5억·10억원 92명(28%), 3억·5억원 59명(18%), 1억·3억원 60명(18%), 1억원 미만 25명(8%) 등이다. 1억원 미만에는 채무가 더 많은 12명(4%)도 포함됐다.

전남지역 신고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동현 전남도의원(131억3000만원)은 가족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반영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신고액이 2배 가량 늘었는데, 최근 발생한 금융채무를 반영하지 못해 신고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명현관 해남군수(80억8000만원)와 김중식 목포시장(50억5000만원)의 자산이 가장 많았다. 명 군수는 1억원이, 김 시장은 2억8000만원이 늘었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적은 도의원으로 김성일 의원이 -6600만원을, 장세일 의원이 -5800만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호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린장례문화원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군 등 VIP전 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내소사이티어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